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2015.2.23.(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

식 순

축 사

-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1
- **우윤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3

인사말

- **강기정**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4
-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새정치민주연합) 5

발 제

- **정치(리더십, 국정운영) 분야** 7
 - 김만흠 원장
-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11
 - 성한용 선임기자 (한겨레)
- **‘새로운 경제 나침반’ 준비없이 ‘부자감세 MB 향로’ 답습 잘못** 15
 - 김진표 전 의원
- **신뢰의 배반: 향후 3년의 과제** 19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과)

-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좌장 : 유용화(정치평론가,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회: 김경협 의원

■ **사전행사**

- 국민의례
- 축 사 : **문재인** 당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 인사말 : **강기정** 정책위의장, **민병두** 연구원장

■ **모두발언(10:30~10:36)**

- 정치분야 : **김만흠** 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
- 경제분야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김진표** 전 의원

■ **종합토론(10:37~11:53)**

- 대통령 리더십
- 민생분야
- 경제

■ **마무리발언 및 폐회(11:54~12:00)**

- 마무리 발언

-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축 사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입니다.

먼저 우리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강기정 정책위의장님과 정책위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누리당 집권 7년, 위기 아닌 게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근간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한반도 정세도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론 분열의 연속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이었습니다.

13월의 세금으로 빨난 봉급생활자들, 삶의 무게에 짓눌린 50대 가장들, 취업난에 꿈을 접어야 하는 청년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들, 늘어만 가는 가게 빛에 한숨 쉬는 주부들, 노후 준비에 걱정이 태산 같은 어르신들, 모두가 한결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은 버려졌고, 오히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이어지며 사회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나라에 돈이 없다고 변명을 하지만, 본질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입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민심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 서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 2년은 분열과 반목의 2년이었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사건에 이어 비선실세들의 국정 농단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인사와 부실인사를 고집하며 국정 혼란을 자초했고, 국민과의 약속을 번번이 뒤집으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으로 정치는 실종되었고, 거둬드는 인사 참사와 편중인사로 인해 국민들은 둘로 나뉘어져 끝없이 대립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사회적

갈등의 골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경제와 민주주의 파탄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한반도평화를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박근혜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과 역할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유용화 동국대 연구교수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5. 2.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축 사

2년 전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화려하게 출범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여성 대통령에게 특유의 꼼꼼함과 섬세함으로 보다 세련된 국정운영을 기대했습니다. 원칙과 소신있는 대통령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 진정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2년을 맞는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원칙과 소신은 사라지고, 잇단 공약파기와 거짓말이 이제는 당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으로 비롯되는 오만과 독선은 무능과 국정혼선으로 나타나고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집권 2년에 접어드는 정권에 대해 국민은 벌써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치평론가들은 벌써 레임덕이 오고 있다는 진단도 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바로 서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불통과 오만과 독선을 벗어던지고, 소통과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회초리(回初理)를 들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인사말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입니다. 30% 초반의 국정지지도는 국민이 내린 성적표입니다.

지난 2년 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의 리더십은 국민과의 소통 대신 청와대 중심의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국정운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인사파탄·비선실세 국정농단·구멍 난 나라재정·약속파기·복지후퇴’와 같은 비정상적 시대를 살아야만 했고, 서민으로 전락한 중산층의 삶은 ‘일자리·가계부채·노후·주거·건강 불안’의 걱정과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자원외교, 4대강으로 구멍 난 나라재정을 담배 값 인상, 연말정산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예고에서 보듯이 서민의 지갑을 털어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부족해 복지 구조조정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통의 리더십을 극복하고 무너진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주체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당은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생활정당,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반성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자리이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대안정당으로 나아가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활발하고 내실 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23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강기정**

인사말

박근혜 대통령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5년 2월 25일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지나야 ‘3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혹자는 아직도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냐고 놀라며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에 비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며칠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취임 2주년을 즈임하여 대선공약 이행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의 분석에 의하면, 20대 분야 총 674개의 공약 중 완전이행은 249개(37%), 후퇴이행은 239개(35%), 미이행은 182개(27%)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실련의 공약이행실적 분석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20개 분야 중 ‘완전이행률’이 가장 저조한 상위 5개 분야입니다. 꼴찌부터 그 순서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행복한 일자리(19%)였습니다.

우리는 대선 시절, ‘100% 대한민국’을 외치던 박근혜 대선후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우선과제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분야들의 공약이행이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논어(論語)의 안연편(顔淵篇)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묻습니다.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자공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먼저 ‘군대’를 포기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바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믿음, 식량, 군대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취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군대’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찰 장악’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렬 수사팀장을 비롯한 7인의 검사를 교체 및 좌천시켰습니다. 백성의 믿음(신뢰), 식량(경제)를 내팽겨 치면서까지 ‘군대’(검찰) 장악에 힘을 쏟았습니다. 공자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통령, 검찰장악으로 권력을 지탱하는 대통령, 국민대통합을 외면하고, 창조경제와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대해서 특히 무관심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의 현황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원칙과 신뢰를 의심받는다면, 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대통합 공약 ▲정치쇄신 공약 ▲창의산업 ▲검찰개혁 ▲행복한 일자리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도, 앞으로 3년이나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우습게 여긴다면, 대통령도 힘들고, 국민들은 더더욱 힘든 3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5.02

국회의원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발제문 01

- 정치 분야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집권의 명분은 실종되고 불통과 고립이 두드러진 특이한 리더십의 2년〉

박근혜 정부 2년, 집권의 기반이 됐던 대통합 등의 정치적 공약은 변명도 없이 실종되고, 새로운 정책 의제로 창조경제 등을 내세웠으나 정권을 대표하는 구호나 정책이 되기는 어려웠음. 결국 집권 명분을 잃은 정권이 돼버렸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특이한 리더십만 남은 가운데, 그 특이한 리더십은 원칙의 리더십으로 치장되기도 했지만,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에 다름 아니었으며, 국민의 상식과 유리된 상황 인식과 국정운영으로 나타났음.

노태우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는 시대적인 또는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나름대로 명분을 제시한 가운데 집권했고, 집권 기간 결과적으로 실패했을지라도 적어도 형식상으로 그 목표를 추구했음. 예컨대 노태우 정부의 타협적 민주화와 5공청산, 김영삼 정부의 문민개혁, 김대중 정부의 최초의 정권교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IMF체제 극복, 노무현 정부의 지역구도 극복과 서민대통령 등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또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정권의 명분이 있었음.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핵심 공약과 집권기반을 변명(설명)없이 실종시킨 특이한 정권임.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책 공약뿐 아니라, 그 이전에 비대위를 구성해 위기 속의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변신시키며 집권 기반을 만들었던 영입 인사들과 시대적인 변화 기조도 모두 폐기되었음. 그렇다고 이런 집권 명분과 기반을 대체하는 새로운 명분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2년을 보냈음.

〈정치적 공방과 무시, 다른 성과 없는 2년, 야당의 무기력도 책임〉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1년은 외형상 인사 파동으로 시작해 댓글 선거개입 수사 논란과 NLL대화록 공방으로 보냈으며, 2년차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 대응과 무시가 자초한 갈등으로 보냈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갈등을 소모적 정쟁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그렇다고 이런 공방을 넘어서 정권이 주도적으로 추구한 어떤 정책적, 정치적 성과도 보여주지 못했음.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적 갈등을 비판했으나 정치적 공방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갈등을 증폭시켜 국정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2년을 보냈음.

정치적 갈등은 상호적인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치갈등 역시 당청관계, 여야 관계에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지만, 한국정치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은 대통령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년의

정치갈등 역시 댓글,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2년 차 후반의 ‘십상시 문건 파동’으로 대표되는 인사문제 등이 말해주듯이 청와대 문제가 가장 컸음. 여당인 새누리당은 갈등의 해소나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히 친박 강경파들이 당의 전면에 있었던 집권 1년 반 동안은 오히려 당이 청와대의 한계를 보완하기보다는 문제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음.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백종천 실장 등의 무죄 판결은 갈등의 증폭과 소모적 정쟁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물론 정치의 또 한축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 역시 스스로 모든 것을 박 대통령에 의존하면서 대안적인 정치 영역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음.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부족에 따른 저조한 지지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야당 스스로의 책임임.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1급비밀문서(나중에 2급으로 조정 재분류)’을 마치 국회 2/3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상상해 국회 동의 절차까지 주도하는 헌정사의 황당 사건으로 기록될 일도 했음.

〈인사문제와 국정운영 방식, 결정적 문제〉

후보 시절 국민 대통합을 위한 인사를 강조하며, 탕평인사에 ‘국가지도자연석회의’까지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실제 이와는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박근혜 대통령 인사 1호였던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 등용이 상징적으로 말해줌. 윤창중 대변인 등용은 대통합,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 정신을 담은 공약으로 공감을 받았던 박근혜 후보가 집권과 더불어 반전되는 출발이었고, 이후 인사는 이런 양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 ‘인사가 만사’라는 상식뿐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인사문제’와 ‘불통’을 지적하고 있음은 알려진 바임.

집권 3년차, 그대로 간다면 정권 경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문제임. 박 대통령 특이한 리더십에서 원칙의 장점을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원칙은 그냥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하는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이 희생을 감내하면서 지키는 가치를 말할 때나 권력자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말임. 박 대통령이 스스로의 위기를 인식하고 대 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지 관건임.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과 한계로 더 문제가 두드러져 보이는 면도 있지만, 특정 개인에 5년을 위임하는 현행 대통령제의 정치리더십은 위험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은 절대 필요한 우선 과제라고 생각됨.

-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발제문 02

- 정치 분야: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성한용 선임기자 (한겨레)

박근혜 정권 2년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파탄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부족한 정치적 자질과 국정을 운용하기에 부적합한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새해 들어 폭락하고 있는 것은 그런 평가의 당연한 결과다.

보수 성향 여론지도층의 부정적 평가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고 보수 성향 여론지도층 인사들이 2012년 12월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뽑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지금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 돼서 대통령이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여당이 됐다면 아마 나라가 망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들의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모든 자리에 지금처럼 보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영남 출신 인사들을 기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임명됐을 것이다. 재벌의 수직계열화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연 자신의 대선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역량을 볼 때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자신의 대선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었을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중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재벌과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인세를 과연 인상할 수 있었을까? 여러가지 의문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어도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취임 1년도 안돼 관료집단과 재벌에 포획돼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2년2개월이 지난 지금 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크게 실망하면서도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정권을 맡길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 지금도 새누리당 지지도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게 나오는 것이 그 증거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 ‘박근혜 정권에 맞서 제대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다. 당장 정부 여당의 폭주에 맞서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해달라는 요구다. 둘째,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내놓는 믿을만한 대안 정당’이다. 쉽게 말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찍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국정운용 역량과 안정감을 보여 달라는 주문이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매우 어렵고도 중대한 문제다. 참고로 선거에 의해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달성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대안 세력’ 쪽을 선택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의 공작으로 평생 뒤집어 쓴 ‘과격하 재야인사’ ‘빨갱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디제이피(김대중-김종필) 연합에 박태준 전 총리까지 끌어들이 디제이티 연합을 완성했고, 선거 구호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내세우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 이후 박근혜 정권에 맞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살펴보면 다소 혼란스럽다. 전당대회 당일 연설에서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에서는 의회정치를 정상화시키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어느 쪽의 메시지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표가 2016년 총선 승리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나선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총선 승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30명의 관심사일지는 몰라도 야당 지지자나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는 아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총선 승리가 아니라 대선 승리에 의한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야당 지지자들에게 2016년 총선은 2017년 대선 승리에 필요한 디딤돌일 뿐인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해 1당을 차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와 영남 절대우위의 정치지형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야당이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부터 모든 정치활동, 정책활동의 초점을 2017년 대통령 선거 승리에 맞춰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언론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극도로 편파적인 언론이 담론시장을 장악하는 현재의 언론생태계를 바로 잡아 나가지 않으면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서도 야당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발제문 03

- 경제 분야: '새로운 경제 나침반'
준비없이 '부자감세 MB 항로'
답습 잘못

김진표 전 의원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운용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부가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한 나침반 없이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박근혜정부 경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정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인수위가 향후 경제운용방향 등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큰 틀에서 국정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끌고갈 인재풀을 확보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나온 대선 공약들 중에는 대통령 임기 내에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공약들도 있기 마련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작성하여 정리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 “공약을 지키고 있다. 지킬 것이다”며 허언(虛言)을 되풀이하면서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

참여정부에서는 5년간 함께 일할 인재들을 추천 받아 5천여명의 인재풀을 확보했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정부 출범 1년이 지나서야 대통령 한마디에 뜬금없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뒷북 쇼’를 허겁지겁, 허둥지둥 벌이기도 했다. 새로운 경제에 대한 확실한 나침반 없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항로를 따라 예견된 실패의 항로를 답습한 것이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새누리당 집권 7년 내내 부자감세로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줬지만, 저성장, 저소득,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부자감세 등 친재벌 대기업 정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236조원이던 10대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이 지난해 3분기 538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유보율도 924%에서 1734%로 꺾충 뛰었다. 재벌들이 곳곳에 자기자본의 18배에 가까운 돈을 쌓아놓고 있지만,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일자리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경제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만 하는 정책은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에 불과하며,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기대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이다.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 붓기, 이른바 Pump Priming Policy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매년 30조원 수준의 재정적자를 늘려만 갈수는 없는 일 아닌가?

따라서 지금 같은 여건에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일으키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기득권을 빼앗는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갈등 유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기득권자인 재벌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고는 구조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필자는 재벌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를 바로잡는 것,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선진 각국이 부자증세를 단행했는데 이명박정부만 부자감세로 거꾸로 갔던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정치적 리더십’을 통하여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슈퍼 리치들이 그랬던 것처럼 재벌들 스스로 세금을 올려달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당시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은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며 청원까지 벌였고 그것이 미국 경제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되었다.

우리 대기업들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기업들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며 자임하고 나서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법인세 정상화와 더불어 경제정책의 중심을 소득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가져가야 한다. 재벌을 설득하여 투자를 늘리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속하는 고학력 주부 노인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정의 낭비와 부패를 막고, 복지지출의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내수시장을 활성화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 -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발제문 04

- 신뢰의 배반: 향후 3년의 과제

김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과)

2015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2년평가

신뢰의 배반: 향후 3년의 과제

2015. 2. 23.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목 차

- ◆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들
- ◆ 경제민주화 폐기와 줄푸세의 기사회생
-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행복 대신 채권자를 위한 추심
- ◆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 저성장·저물가 속에 침몰하는 대한민국
- ◆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
- ◆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 박근혜 정부의 과제: 새로운 줄푸세 집중
- ◆ 야당의 과제: 걸멋에서 내실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들

- ◆ 신뢰(Trust), 약속(Promise)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의 신뢰
 - 약속을 지키는 정부
- ◆ 경제민주화
 - “모두가 잘 사는” 경제 (?)
- ◆ 특정 계층을 겨냥한 공약
 - 노령연금 20만원
 - 20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 ◆ 성장과 일자리
 - 고용률 70%
 - 창조 경제

3

경제민주화의 폐기와 줄푸세 희생

- ◆ 경제민주화 폐기
 - 인수위 정책 과제에서 축소 조정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사실상 실종
- ◆ 줄푸세의 기사희생
 - 만성적 재정적자 에도 불구하고 증세 완강히 저항중
 - 규제 완화: 최근의 “유일한 정책 기조”
- ◆ 다만 국가 기강은 해이
 - 한수원 비리, 방위산업 비리: 부패한 정부
 - 세월호: 무능한 정부
 - 금융감독체계 개편 좌초: 모피아 등 이익 집단에 포획된 정부

4

금융기관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 ◆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을 속인 공약
 - 개인채무자들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공약
 - 20조원의 국가 돈을 투입해 개인채무 탕감 (최대 70%) 약속
- ◆ 현실: 금융기관을 위한 채권추심기구로 전략
 - 국가의 돈은 단 1원도 투입하지 않음
 - 자산관리공사 및 금융기관이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범
 - 채권 추심 후 이익이 나면 금융기관이 배당받는 구조
 -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악성 채권에 대한 구조조정 성격
- ◆ 전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장”하여 정착 시도
 - 자리 신설을 위한 모피아의 조직 이기주의와 결합하여 모순이 확대 재생산 중

5

깨끗이 잊혀진 『경제혁신 3개년계획』

- ◆ 당초 취지
 - 집권 1년차를 정리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의 기본 골격 설계
 -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모델
- ◆ 성급했던 입안 및 변경 과정
 -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급
 - 약 50일 남짓한 입안 기간 => 졸속
 - 2개의 버전 (추경호 버전 vs. 수첩버전) => 10대 과제로 낙착
- ◆ 재보선 이후의 폐기 과정
 - 2014. 6월초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발언
 - 2014. 7월 최경환 부총리 집권 이후 명시적 폐기
 - 가계부채 통제 =>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All-in”

6

침몰하는 대한민국

- ◆ 저성장·저물가 속에 침몰하는 대한민국
 - 수출을 제외한 소비, 투자 등 수요 부진
 - 노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여파로 총공급능력도 침체
- ◆ 과거 3개 정권의 거시 성적표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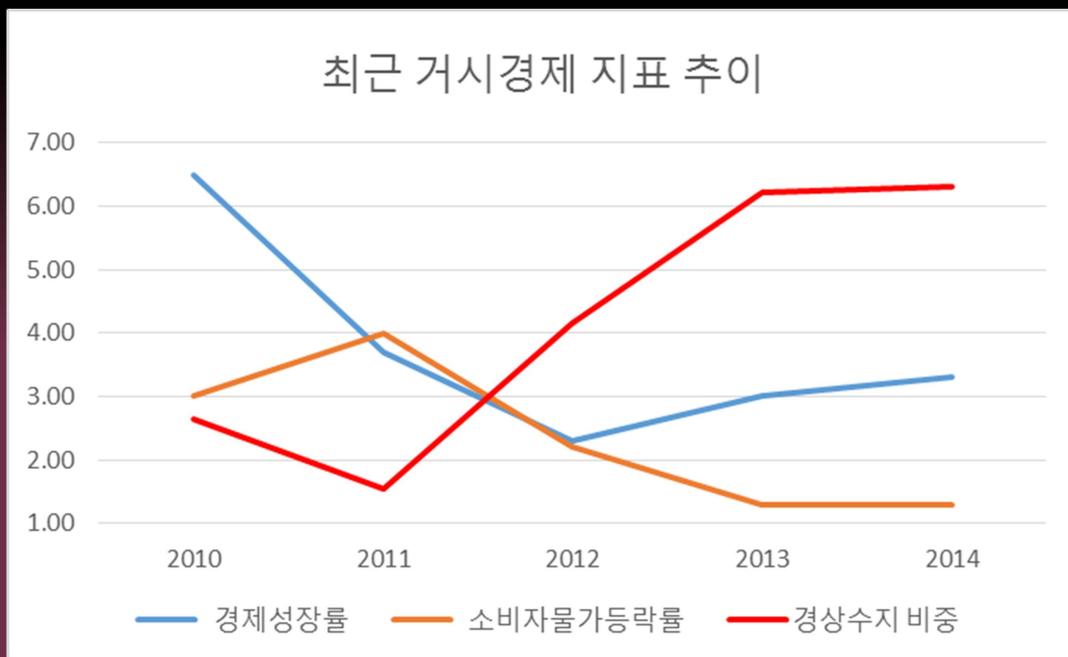
단위: %

	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경상GDP
노무현 정부	4.5	2.9	1.7
이명박 정부	3.2	3.3	2.5
박근혜 정부	3.2	1.3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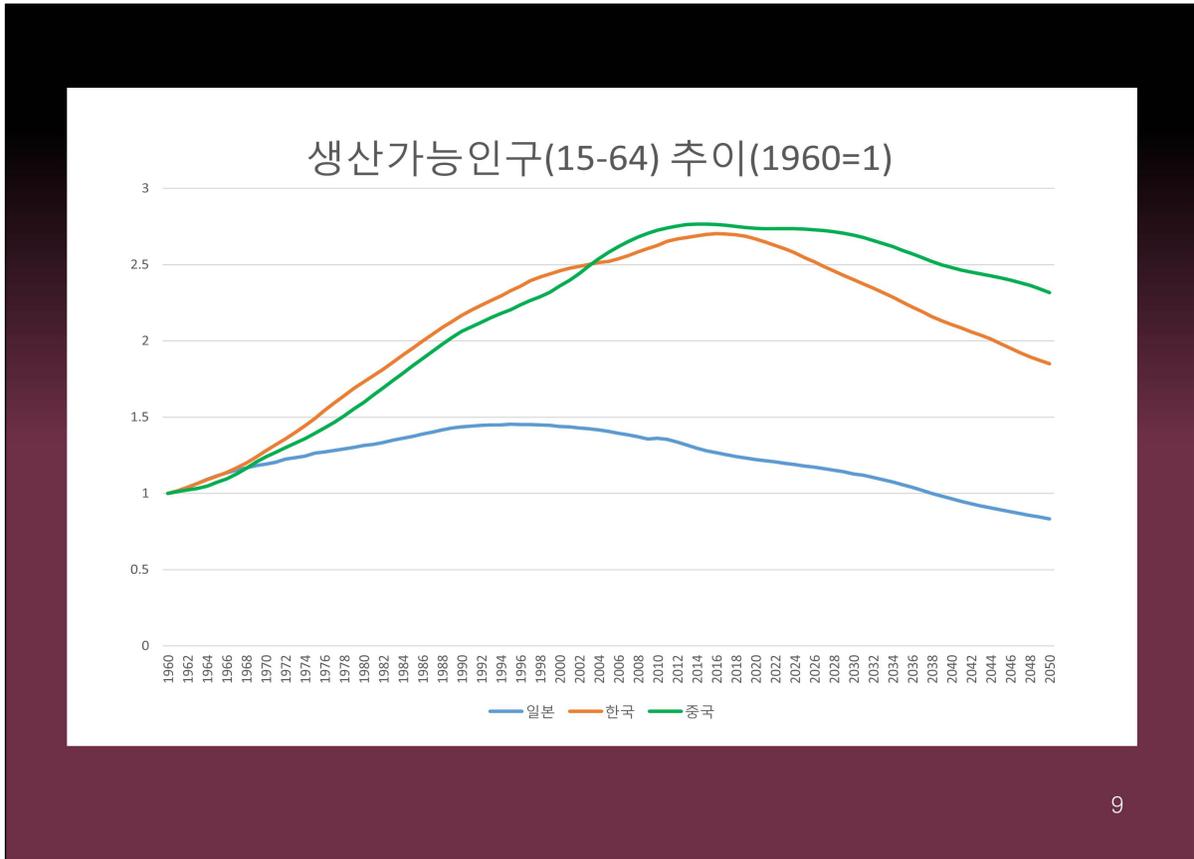
1) 기간 평균(박근혜 정부는 초기 2년), 단위: %
2) 2014년 성장률 및 경상수지 비중은 잠정치

7

최근 거시경제 지표 추이



8



9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

- ◆ **집권 1년차 (2013년)**
 - 공약가계부 작성 (“알뜰한 재정” 표방)
 - 이명박 정부의 과대포장된 세수추계 결과로 텅빈 국고 인수
 - 재정적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
 - 소득세제 개편
- ◆ **집권 2년차 (2014년)**
 - 재정적자 지속 + 향후 재정적자 지속 충분히 예상
 - 기업소득환류세제 변질
 - 자산소득(부동산, 금융)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 확대
- ◆ **집권 3년차(2015년)**
 - 재정적자 지속
 - 법인세 증세 완강히 거부중

10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 **단기: 가계 부채 통제**
 - 가계 부채의 문제는 우리 경제 최대의 뇌관
 - 정부가 “개별적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특성
 - 부동산 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양질의 대출이지만,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구조조정 어려운 악성 부채
- ◆ **중기: 성장 동력의 발견**
 - 복지, 재정적자, 고용 등을 한꺼번에 푸는 유일한 해법
 - “기업에 구걸해서 성장할 수 없다”는 최근 경험을 명심해야
- ◆ **장기: 세대간 경제적 부담의 균등화**
 - 정치적 발언권 없는 미래세대에 모든 것 떠넘길 가능성
 - 노령층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 필요

11

박근혜정부 과제: 새로운 줄푸세

- ◆ **새로운 관점의 줄푸세 도입 필요**
 - 줄이고: 부정부패와 무능을 줄이고
 - 풀고: 나라 공간을 저소득층과 미래세대에 풀고
 - 세우자: 진정한 의미의 “법치”를 세우자
- ◆ **부정부패 일소**
 - 멈춰선 원자로, 멍텅구리 무기, 론스타에 혈세 퍼주기 작태 청산
- ◆ **가난 해결**
 - 한 세대 만에 다시 만나는 “가난”이라는 단어
 - 정치적 지지층으로서의 노령층 vs. 성장동력으로서의 청년층
- ◆ **법치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
 - 일상적 조직이 작동하는 사회 => 시장경제의 밑거름

12

야당의 과제: 걸밋에서 내실로

- ◆ **경제정책의 정체성 확립**
 - 걸밋: 선부른 중도, 타협 성향
 -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국민”의 허구에서 벗어나야
- ◆ **성장 정책의 중요성 인식**
 - 오직 성장만이 복지, 재정적자, 고용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
 - 재벌을 비판하면서도 재벌/투자에만 기대는 성장정책 폐기
 - 노동과 인간, 내수와 삶의 질에 기반한 성장정책 없으면 망국
- ◆ **재벌 정책에 대한 확고한 견해**
 - 재벌 특히 삼성에 한없이 약한 야당의 모습 탈피
 - 성장하기 위해 재벌에 구걸하는 무능한 정책방향 폐기
 - 재벌을 개혁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 필요

13

Thank You

14

